

핵심 관련자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등 혐의 입증 주력

비상계엄 사태 전방위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연일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군검찰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분산돼 있는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핵심기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포고령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육사 487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총참모 출신이며 비상계엄에 깊숙히 관여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

검찰, 방첩사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국금지
곽준근·국방부 대변인도 소환
경찰, 김용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10시부터 재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총참모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으며, 다시 불러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이날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준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총참모 4년 후배인 이 전 장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휴대 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계엄 당시 사용 여부를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계엄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각각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상계엄모의 문건에 여순사건 '반란' 편휘

제주 4·3은 '폭동'으로 표현

국군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 갑)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령'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이 적혀 있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 11월 방첩단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서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이라는 문구는 여순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여순사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서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수십년 동안 '반란' 오명을 썼다가 지난 1995년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령으로 '제주 4·3사건'을 '제주폭동'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소요사태'로 편휘하는 표현도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정 컨트롤타워 없이 각계약진식 중복수사

검·경·공수처 계엄수사 혼선

검·경이 서로 계엄 수사를 주도할 당위성을 내세우며 경쟁을 하고 있어 당분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나 중복, 수사 경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경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으나, 수사 주체 논란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나 조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중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
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까지
여인형 전 사령관 중복 소환도
MB뎀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당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3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경찰도 이날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날짜를 조율 중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향후 비상계엄 법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송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라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할 때에는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한 내용과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검 전까지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양상도 연쇄된다.

한편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구조개혁)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행태로 합의하고 갈등을 조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분을 놓고 국회의장이 나서 조율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